

www.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September 2012 Vol. 38

9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당면과제

Interview
박영순 구리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38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newsletter@krila.re.kr

이달의 **issue** 국고보조금제도의 당면과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두언 국고보조사업의 향후 개선과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ILA 논단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당면과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iew 박영순 구리시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탐험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선사하는 걷기 여행, 구리 둘레길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사례 해외 주요국의 보조금제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통계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부담 현황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동정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국고보조사업의 향후 개선과제



한 표 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근 영유아 보육료 확대와 관련하여, 국비예산 3,698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비 매칭 부담액 3,78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여건의 악화로 인해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이전부터 이러한 현상은 있어 왔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06년부터' 11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평균증가율은 10.4%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은 20.2%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동일기간동안 연평균 25.9%로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지방재정체계 하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르는 별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루트는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 등이 있는 바, 이중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경기변동 및 지역경제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세입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세외수입 역시 대부분이 사용자·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정재원의 비중이 높아 복지사업에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특히 국고보조율의 증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는 기준보조율을 두고 있다.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는 바, 100%, 80%, 70%, 50%, 40%, 30% 및 20% 등의 정률보조와 정액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체계는 1986년도에 개정되었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법정 기준보조율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기준보조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이 관련부처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조율의 설정이 불명확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자의성 개입의 우려가 있다.

둘째, 80년대의 국고보조사업 정책 기초가 보조율 구조에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보육료지원 등과 같이 출산장려를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된 사업의 기준보조율 50%가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다. 이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조율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준보조율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지출 부문에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많은 개별 보조사업의 보조율 책정은 사전적·법적 결정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수립 기간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업무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80년대 설계한 현행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① 국고보조사업 중 해당사무의 성격상 명백하게 국가사무, ②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또는 지역적 특성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③ 국가정책수립과 연계되고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관리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있는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재정적 여건 등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차등보조율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당면과제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사용용도와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으로 재정형평화 및 재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와 조건이 정해진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으로 국가재정자원의 효율적 안배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제도는 국정운영과 지방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협의, 조정, 감독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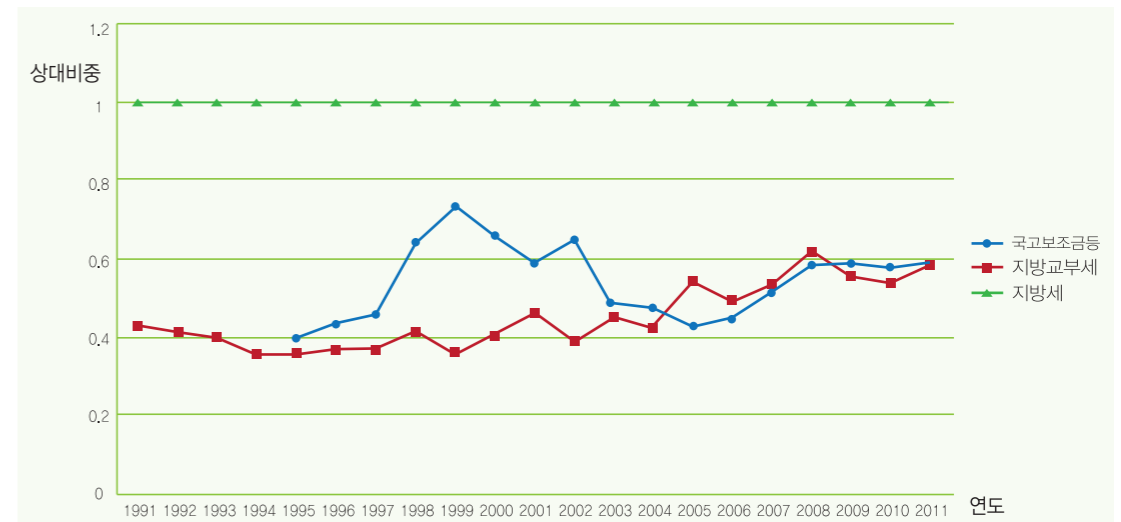
국고보조금제도는 그 동안 여러 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해 왔지만, 동시에 대상사업 선정 원칙 결여,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설정 불합리성, 자금 불안정성, 낮은 사업 계획성, 소액·유사사업 과다, 성과관리 미비 등의 문제와 한계도 드러내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고보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해 본질적인 구조개편이 단행된 적이 없는데, 중앙·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국가재정자원의 효율적 운영 문제를 깊이 인식할 때 지금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구조개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1) 이 글은 임성일의 최근 발표문(“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재정』 제5호, 2012)을 토대로 보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국고보조금제도의 현황: 지방재정 상의 위상과 현황

역사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기간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도별로 20%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로 변화되었고 급기야 2012년에는 약 35% 수준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계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크나큰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지방재정에 중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국고보조금은 재정과급효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중앙·지방간 재정 및 행정 협력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 지방세 대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상대비중(1991-2011)



*주: 전국 대상으로 지방세를 1로 설정하였을 때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상대비율을 비교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은 2012년 현재 53조 3천억원(국고보조금 34조 6천억원, 지방비 18조 7천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24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되고 있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15조 9,874억원(전체 국고보조금의 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4조 5,457억원(13.1%), 농림수산식품부 4조 1,707억원(12.1%), 환경부 3조 6,524억원(10.6%), 문화체육관광부 1조 2,421억원(3.6%), 행정안전부 1조 660억원(3.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개 부가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의 과점현상(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으로 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의 거의 절반(46.8%)을 차지하는 새로운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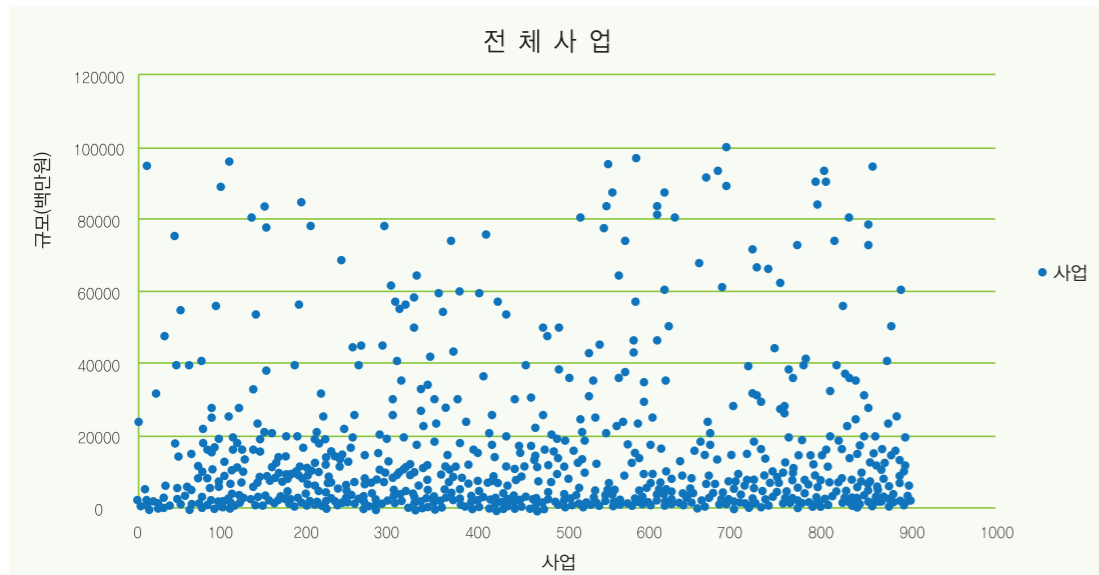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 동안에 크게 증가한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인데 기인한다. 특히, 법적 의무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의 경비부담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림 2>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호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유 공간은 줄어들고 재정압력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 변화(2000-2012)



국고보조사업은 1,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사업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소형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2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은 88개 인데, 이는 금액 면에서(42.5조원) 전체 국고보조금의 80%를 차지한다. 100억원 이상 중규모사업은 334개 사업(10.7조원)인데, 이는 전체 사업수와 보조금의 각각 1/3, 20%를 차지한다. 2)

<그림 3>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분포도(2012년도)



*주 : 그림의 표현 상 문제로 천억 원 이상 86개 국고보조사업은 분포도에서 제외하였음

2)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물부 15개, 환경부 14개, 국토해양부 12개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자치단체별로 파악하면, 단체당 1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당면과제

국고보조금제도가 국가재정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만일 앞으로도 이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50조원 이상(GDP의 약 5%)의 국가재정자원(중앙·지방재정)이 지출되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은 결코 담보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향후 국고보조사업이 개선해야 할 핵심 당면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정책과 부처 및 국회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상사업의 선정 원리와 체계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제도의 효율성 저하와 중앙·지방간의 신뢰성 마찰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재의 임의적 사업별 결정방식(기획재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사업 유형화(특성화) 기준에 의해 보조사업이 시스템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기준을 거시·미시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보조율시스템은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하는 원칙과 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율 체계가 복잡다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기준을 확고하게 설정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보조율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보조율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법정사업을 중심으로 보조율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그것은 법정사업이 비법정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조율체계의 단순화는 정책보조를 포함한 5단계 이내의 구축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는 소액보조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기준보조율의 하한(예컨대, 40%)을 법적으로 정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운영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사전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는 관계(제도 및 행태)를 정립해야 한다. 근년에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지방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주체가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의 정치·행정 환경과 재정상태를 감안하는 제도적 장치와 행태가 정립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을 실질적인 수평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이나 보조율 결정과 같은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을 참여시켜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재정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와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기존제도를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도의 운영, 자금의 안정성 및 예측성, 국고보조사업의 기득권화(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기능 및 권한 확대), 지방의 사업 관례화 등),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의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개선과제이다.

고구려 기상을 담은 명품 디자인 자족 도시로의 비상, 구리시

박 영 순
구리시장



“ 구리시는 한강, 왕숙천과 아차산, 동구릉 등 산과 강이 잘 조화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구리시는 1986년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온 도시입니다. 서울 변방의 작은 위성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평생학습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도시, 명품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아차산·왕숙천·한강 등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편리해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한강 이남 최대의 고구려 유물도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의 왕릉군이 있는 동구릉 등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이 보이는 구리시입니다.

특히, 최근에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분야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 디자인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

구리시는 4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이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양식인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운동으로 책 읽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답고 따뜻한 공정한 사회 조성, 세 번째는 우리시의 비전을 담은 ABC&DEF 구리 운동이며, 네 번째는 태극기 도시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의 힘은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우리 인생의 스승이자 평생의 벗으로 삼아 항상 손에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TV를 안방으로 옮기고 거실을 책이 있는 독서공간으로 만든 가정이 3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공원, 지하철 역사, 버스승강장 등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을 비치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시민들이 독서를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가 지향하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우리시의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공정한 사회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0대 공정한 행정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보다 조금 더 공정한 행정을 솔선하여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속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한 사회를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셋째, 『ABC & DEF 구리운동』은 2007년 4월 구리시를 놀랍고(Amazing Guri), 아름답고(Beautiful Guri), 깨끗하게(Clean Guri) 만들고자 선포한 『ABC구리운동』을 DEF(Design, Education, Fantastic)로 까지 확대한 것으로써 명실상부한 『GREAT 구리』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6대 분야 60대 실천과제 및 시민실천 5대 과제를 선정하여 범시민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ABC구리운동을 선포한지 5주년이 되는 해로써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클린 구리의 날을 운영하여 골목길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변 화단 조성으로 화분 6,600개를 설치하여 36만분의 꽃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골목골목 버려져있는 땅을 개간하여 썸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태극기의 도시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임을 감안 할 때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국경일조차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족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위대한

대제국 고구려의 역사와 동구릉에 살아 숨쉬는 조선왕조의 역사, 그리고 망우리 묘역에 영면하고 계신 소파 방정환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 등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역사 인물들의 호국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고장인 구리시부터라도 태극기 사랑운동을 범시민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작게는 구리시민이 하나가 되며, 나아가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합 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선두 주자가 되고자 지난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태극기의 도시’ 임을 선포했습니다.



국제 디자인&개발 컨퍼런스

“**‘명품 디자인 자족 도시’ 라는 시정 목표를 가지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유치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리시는 서울 동북부 사통팔달 거점도시로서 수도 서울과 접한 최적의 교통·관광을 제공하고, 한강과 왕숙천의 친수공간을 활용한 주거·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준급의 디자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세계적 디자인도시를 목표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감도

이를 위하여 구리시는 2007년도에 ‘NCD 2015 프로젝트’를 최초 계획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및 외자유치를 위하여 2010년 10월에 건축 및 디자인 관련 글로벌 기업 60개 회사가 참여한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내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2011년 6월에 Nielsen 그룹과 동아일보 주최로 세계적 건축가 및 디자이너 등 30여명의 해외 전문가와 600여명 국내전문가 참여한 제1회 IDD 컨퍼런스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제2회 IDD (International

Design&Development) 컨퍼런스를 금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면 1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사양화되어 가는 국내 가구·섬유·도자기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디자인 관련 기술발전 및 산업디자인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그 외 역점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이 민선5기 취임 2년차로 시정목표를 ▲따뜻한 복지·건강도시 ▲푸른환경 녹색·꽃의 도시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혁신교육·명품 평생학습도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도시 ▲명품 디자인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만시민의 염원인 별내선(지하철8호선) 광역철도 조기착공과 지하철6호선(신내동~도매시장) 연장 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동구릉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문화·음악·예술의 전당이 될 구리아트 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공약 이행 시스템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민선 5기의 공약사업의 이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민선5기에는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건설을 위해서 세계 3대 디자인 도시를 꿈꾸며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6대 핵심공약과 8개 분야 35개 명품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민선4기에 이어서 지난 2월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실태를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목표달성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등급인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선사하는 걷기 여행 구리 둘레길

SA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웹소통 분야에서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단위의 7개 도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41개 공약사업중 6개의 공약 완료사업을 포함해서 100% 공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리시의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거대 서울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과 고구려역사의 흔이 서려있는 아차산 등 깊이 있는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며, 수도권 최대의 꽃 단지에서 펼쳐지는 유채꽃축제와 코스모스축제는 물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 한강과 왕숙천, 아차산으로 둘러싸인 친환경 도시이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서비스의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구리시는 역사적, 환경적, 지리적으로 최고의 여건을 가진 도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리시는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이란 신념을 갖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과 구도심의 뉴타운 사업, 갈매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자주재원 확보로 경쟁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 디자인도시로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답 · 정리 : 구 찬 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바쁘고 지친 일상 속의 달리는 차 안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 밖의 풍경을 무심코 바라만 봤다면, 이제는 두 발을 땅으로 옮겨 직접 땅을 밟으며 주변의 모든 풍경과 자연을 천천히 보고 느끼며 감상해 보자. 땅을 걷고 있던 두 발은 어느새 자신의 내면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과 정신 속을 속속들이 둘러보고 있을 것이다. 걷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맑고 깨끗한 정신은 그동안 일상 속에서 찌들고 지쳐있던 자신에게 삶의 에너지와 환희를 가슴 가득 선사해 줄 것이다.

걷기 여행을 위해 굳이 먼 곳으로만 떠날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의 가까운 곳에도 걷기 여행을 위한 훌륭한 코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조건, 최고의 환경기초사업, 생태 복원된 장자못, 아기자기한 생태습지가 서로 연결되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리시는 서울 4개 구와 접해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다. 자연에서 묻어나는 흙냄새, 풀냄새, 새소리, 물소리,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구리 둘레길은 왕숙천, 장자못, 한강, 아차산, 동구릉을 연결하는 둘레길 4코스 39.4km로 조성 · 운영되고 있다.



구리 둘레길은 파고라와 자전거 거치대, 의자가 있는 쉼터, 방문객 편의를 위한 아름답고 세련된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학습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또한 코스별 특색에 맞게 아차산과 한강의 유래, 동구릉 역사, 왕숙천 지명유래 등, 길 안내시설 7종 100여점이 설치되어 있어 걸으면서 우리고장의 역사도 배우게 되는 값진 시간도 제공해 준다. 특히, 아차산 보루길은 500m 간격으로 수목 표찰 및 간이 이정표, 현재 위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둘레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왕숙천변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화단이 잘 정비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운동공간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왕숙천 생태습지는 인창천

수질을 정화해 왕숙천으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갖춘 생태습지로 물억새, 부들, 갈대 등의 수생식물과 느티나무, 산철쭉 등의 육상식물도 식재되어 있고, 습지 내에 징검다리 등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다양한 습지식물과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왕숙천 습지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리 둘레길은 왕숙천, 장자못, 한강, 아차산을 연결하는 4개 코스(39.4km)로 강과 산 그리고 60만평의 자연이 숨쉬는 도시 숲, 동구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코스마다 다른 주제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따로따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코스별 마지막 지점은 구리시장, 남양시장,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의 사람 사는 냄새도 함께 느낄 수 있어 그 재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

-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구리 둘레길 제 1코스

- 제 1코스 : 장자호수공원 → 고구려대장간 → 아차산 → 망우산 묘역 → 구리시장 · 남양시장 (15.8km, 5시간 40분)

생태복원자원의 가치가 큰 장자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광명소로 떠오른 고구려대장간마을과 아차산 일대 보루군, 근·현대사 위인을 만나 볼 수 있는 망우리 묘역을 연결,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둘레길' 로 만들었다.

- 생태복원과 삶이 있는 구리 둘레길 제 2코스

- 제 2코스 : 광개토태왕비 → 한강시민공원 → 왕숙천 생태습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 (9.6km, 2시간 35분)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광개토태왕비 · 동상, 사계절 꽃이 피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수도권 지역의 조깅 · 산책코스 Best에 오른 구리왕숙천시민공원을 연결하여 '생태복원과 삶이 있는 둘레길' 로 만들었다.

- 생활과 옛 모습이 있는 구리 둘레길 제 3코스

- 제 3코스 : 구리광장 → 하수처리장 → 구리타워 → 돌섬 · 벌말 → 장자호수공원 (7.3km, 2시간 30분)

구리역에서 시작하여 사계절 테마 놀이공간 구리광장, 생태계의 법칙을 알 수 있는 하수처리장, 곤충생태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편익시설 구리자원 회수시설과 구리타워, 왕숙천의 옛 물길을 볼 수 있는 돌섬 · 벌말을 묶어 '생활과 옛 모습이 있는 둘레길' 로 만들었다.

- 구리 옛 모습이 살아있는 마을 안길, 구리 둘레길 제 4코스

- 제4코스 : 동구릉 → 나만갑 신도비 → 사노리 → 사노리 나들목 (6.7km, 2시간)

조선의 숨결이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나라사랑을 다짐해보는 나만갑 신도비, 구리의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사노리(四老里),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한 구리왕숙체육공원을 묶어 '구리 옛 모습이 살아있는 마을 안길' 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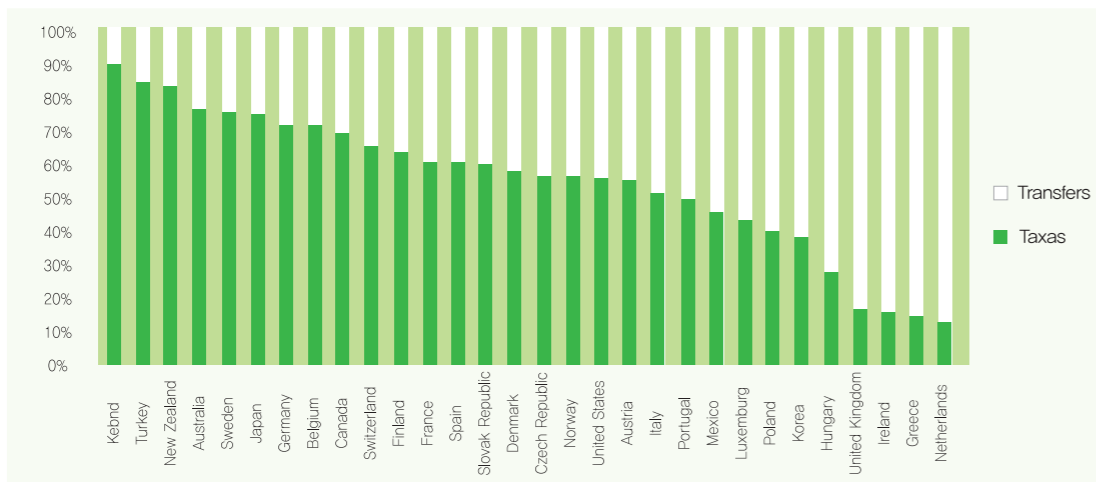


구리의 주변 자연생태환경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배울거리로 가득 차 있다. 즐거운 휴일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떠나는 나들이 코스로, 또는 혼자만의 호젓하고 평화로운 산책으로도 그만인 '구리 둘레길 걷기' 는 우리 인간에게 걷는 행복을 다시금 안겨주고, 우리 주변 자연생태 환경과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마련해 줄 것이다. 빠르고 바쁘게 흘러만 가는 현대의 지친 일상 속에서 느낌의 미학인 걷기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지를 다시 한 번 느껴보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구리 둘레길로 떠나 보자. 주말을 이용하여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구리 둘레길을 걸으며 심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 또한 구리 둘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보고, 길동무와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자기 자신과 만나는 내면으로의 여행도 떠나보자. 아마도 삶이 주는 축복에 저절로 감사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보조금제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책 필요에 의해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 재정이전(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이전제도는 크게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과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의 역사 및 정치·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연구자별로도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일반보조금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 지역간 재정형평화 수단이다. 이에 비해 특정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s)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및 광특회계 보조금이 해당되며,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보조금보다 특정보조금 중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Blöchliger(2006)는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가 세원이양보다는 이전재원(transfers)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특정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재정수요의 증가가 사회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 고유사업 분야에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수준 증가 및 세계화의 진행으로 개인간 임금격차 및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를 조정하기 위한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세입 구성 (2005)



*자료 : H. Blöchliger and O. Petzold(2009)

다음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보조금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영국은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아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앙정부 보조금과 사업용레이트(business rates)를 합하여 총의존재원(Aggregate External Finance)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공식보조금(formula grant)과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공식보조금은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비주거레이트(non-domestic rates) 및 경찰보조금(police grant)으로 구성되며, 최근 세입지원교부금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대표적 특정보조금은 학교지원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으로 2006~07년에 도입되어 학교 및 교육관련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며, 종전의 공식보조금 부분과 소규모 특정보조금을 통합한 보조금이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의 삭감을 경험하고 있고, 학교지원보조금 배분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반재원인 세입지원교부금이 축소되고 학교지원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재량권이 축소되자 보조적 조치로 지역기반교부금(Area Based Grant)을 도입하였다. 지역기반교부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보조금으로 종전의 부처별로 분산된 55개 보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지역기반교부금은 지방자치부(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및 6개 부처에 각기 부처별 지출한도로 포함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부에서 이를 통합하여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다양하고 정부간 재정관계도 매우 복잡하다.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비중은 2009년 31.8%로 2006년 22.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정부는 지방정부 지원을 해야 하므로 순지출은 자체수입보다 약간 적은 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이전재원 비중이 약 37.7%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연방과 주정부에서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정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많은 행정 자원이 투입됨에 따라 학계와 지방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면서 보조금의 통합과 단순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노력이다. 미국의 포괄보조금 제도는 1971년 닉슨행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981년 레이건대통령은 50개 특정보조금과 3개 포괄보조금을 통합하여 9개 포괄보조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의 복지재정 기능이양과 책임분담이 강조되면서 복지재정 규모가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신공공관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중앙-지방간 성과계약 방식에 의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1996년 한시적 취약계층지원(TANF)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보조인데, 의료보장(Medicare, Medicaid), 취약계층지원(TANF) 등으로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정부 일반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09)은 47.8%로 가장 크고,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31.8%로 다음을 차지하며, 지방정부는 조세수입(39.4%)과 이전수입(37.7%)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주 지방정부의 예를 보면 연방과 주의 보조금 비중은 30.4%를 차지하며, 이 중 주정부 보조금이 78%, 연방정부 보조금이 22%를 차지한다. 주요 기능별 연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federal aid)은 보건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이 57.3%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교통부분과 주택및도시개발 부분이 10.9%를 차지하며, 교육(8.0%)과 농업(5.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보조금으로 국고지출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고지출금은 경비구분에 따라 국고부담금, 국고위탁금,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고부담금은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령에 근거해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적 사무를 위한 경비의 국가책임분이다. 국고위탁금은 선거, 통계 등 국가위임사무 경비로 지자체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경비를 일컫는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장려적 재정원조적 보조금이다. 부담금의 부담률과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이나 정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보조금은 보조율 등을 반드시 법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예산과 보조요강'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입에 있어 국고지출금의 비중은 1980년 21.3%에서 1990년 12.5%로 크게 줄어든 이후 2000년 14.4%, 2005년 12.7%, 2010년 14.6%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0년도 국고지출금은 총 14조 3천억엔으로 이 중 44%가 도도부현에 교부되고 나머지 56%가 시정촌에 교부되었다. 국고지출금 종류별로 보면 국고부담금 85.6%, 국고위탁금 2.6%, 장려적/재정원조적 보조금 11.8%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고지출금은 지방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0년 지방재정계획상 국비지원율은 평균 40.5%로 나타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보조금 운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정도가 다르고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차이도 커서 선진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발전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만 주요국의 최근 특징을 보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 주요 대상이 보조금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특정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최근에는 포괄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 능 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부담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사업 수 추이

- 2012년의 경우,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45.3조원으로, 2,053개(2011년 기준) 세부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 특히 최근 6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6.4%이나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7.2%로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26.9%(12,조원), 자치단체보조는 73.1%(33,2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표 1 〉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사업 수 추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
보조금 규모(조원)	32.0	34.7	40.1	42.2	43.4	45.3	7.2
· 자치단체보조	22.4	25.0	29.4	31.6	32.3	33.2	8.2
· 민간보조	9.6	9.8	10.7	10.5	11.2	12.2	4.9
보조사업 수(개)	1,421	1,711	2,003	2,081	2,053		9.6
정부 총지출(조원)	238.4	262.8	301.8	292.8	310.9	325.4	6.4

* 주 : 기획재정부

2.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부담 추이

-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관련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 보조율은 112개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가 마련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이들 국고보조의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보조율은 2006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림 1〉 국고보조율 및 지방비부담율 추이



〈 표 2 〉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부담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국고보조사업	26.15	31.97	35.01	41.77	46.74	48.62	52.61	12.4
국고보조금	18.33	20.90	22.77	26.54	29.22	30.09	32.06	9.8
지방비부담	7.82	11.07	12.24	15.23	17.52	18.53	20.55	17.5

*주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된 금액
 자료 :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

3.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부담 추이

-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 6년간(2007-2012)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예산의 연 평균증가율은 14.7%이나 이에 대한 지방비부담액 증가율은 연평균 21.0%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증가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표 3 〉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부담 추이

(단위: 조 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중앙정부 총지출	238.4 (6.4)	262.8 (10.2)	301.8 (14.8)	292.8 (-3.0)	310.9 (6.2)	325.4 (5.5)	6.4
보건복지부 예산	11.5 (18.7)	15.9 (37.5)	19.3 (21.6)	19.3 (0.1)	20.7 (5.3)	22.2 (7.2)	14.0
국고보조사업 (보건복지부)	7.8 (29.5)	11.7 (42.7)	13.9 (16.7)	13.7 (8.4)	14.4 (5.3)	15.5 (7.6)	14.7
지방비부담	2.9 (32.6)	5.1 (77.9)	6.1 (21.3)	6.2 (14.0)	6.7 (1.4)	7.4 (10.4)	21.0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

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예산과 비중

- 지방예산 규모의 증가율 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액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발전 및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49.5%와 자체사업 50.2%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임

〈 표 4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예산과 비중

(단위: 억 원, %)

세출분야	정책사업(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예 산	비 중	예 산	비 중
합계	1,207,256	600,789	49.8	606,467	50.2
일반공공행정	85,937	4,885	5.7	81,052	94.3
공공질서및안전	25,087	16,018	63.8	9,069	36.2
교육	97,950	6,001	6.1	91,949	93.9
문화및관광	71,145	36,040	50.7	35,105	49.3
환경보호	147,217	56,863	38.6	90,354	61.4
사회복지	304,717	273,011	89.6	31,706	10.4
보건	20,760	13,555	65.3	7,205	34.7
농림해양수산	103,434	79,019	76.4	24,415	23.6
산업중소기업	29,985	14,509	48.4	15,476	51.6
수송및교통	138,972	51,124	36.8	87,848	63.2
국토및지역개발	117,127	49,086	41.9	68,041	58.1
과학기술	5,145	530	10.3	4,615	89.7
기타(예비비 등)	59,779	148	0.2	59,631	9.8

*주: 2012년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비(일반+특별회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2

이 상 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일 심포지움 개최

주 제 /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 시 / 2012. 9. 17(월) 14:00 ~ 18:1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동해자치체문제연구소

「지방자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주 제 / 지방자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일 시 / 2012. 9. 27(목) 14:00 ~ 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8월호)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KRILA 교육연수
 02 · 3488 · 7353

- 제4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9. 5 ~ 7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사업예산과 복식부회계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9. 5 ~ 7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9. 12 ~ 14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5기 지방성인지예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9. 19 ~ 21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4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9. 19 ~ 21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